2021. 3. 17. (수) 언론보도

경인방송 TV FM

2021년 03월 16일 (화)
종합

렛츠디엠지 평화예술제 조직위·집행위원장에 임동원·김명곤 전 장관 위촉

16일 오후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위촉장수여식에서 위촉장 수여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경기도는 오는 5월 열릴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과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을 각각 위촉했습니다.

도는 "임동원 전 25대?27대 통일부장관은 6.15 남북공동선언의 주축이자 통일·외교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평화 메신저 역할을 수행하는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집행위원장으로 위촉된 김명곤 전 42대 문화관광부장관은 2017년 전주대사습놀이 등 국내 각종 행사의 조직위원장과 총감독 등을 역임하고, 현재 배우와 감독,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도는 김 위원장이 Let's DMZ 총괄감독을 겸임하며 이번 행사를 평화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올해 3년차를 맞는 Let's DMZ 평화예술제는 비무장지대(DMZ)의 특별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리는 종합 문화예술행사입니다.

▲DMZ 포럼 ▲DMZ 콘서트 ▲DMZ 전시·체험 ▲DMZ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Let's DMZ 평화예술제를 이끌 조직위원으로는 국회의원 박정(파주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후덕(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양천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안양시동안구을,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심규순(안양4,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최만식(성남1, 더불어민주당),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준권(한국목판연구소 소장), 김진향(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우희종(서울대 교수), 유인택(예술의 전당 사장), 이은(명필름 대표), 이종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조영미(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등 16명이 선정됐습니다.

Let's DMZ 평화예술제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상의 평화를 다시 찾는다는 두 가지 의미로 '다시, 평화'를 슬로건으로 오는 5월 중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준석 hjs@ifm.kr

경기신문

2021년 03월 17일 (수)
04면 정치

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결실… "경기 북부, 위험 노출서 벗어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3개월 계도기간 거쳐 30일부터 시행
위법시 3년이하 징역 등 강한 처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 대북전단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1여 년 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의 노력으로 점철된 법안 시행이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긴 시간 고통받아 온 경기 북부 접경지역 위험의 굴레를 끊을까.

이 지사는 지난해 6월 불법 대북전단 근절을 선언하며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연천·포천·김포·파주·고양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이나 대북전단 등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 살포, 사용 등이 모두 금지됐다.

그는 보수단체가 북한 접경지역 중심으로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에 따라 강력한 특단을 내렸다. 당시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 경색국면으로 대북전단 살포는 인근 주민들에게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왔다.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오랫동안 위협을 느껴온 파주 시민들은 같은 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이뤄진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살포 강행에 고통을 호소하며 금지 집회를 하는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 관련 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며 위험에 노출된 주민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1월 29일 국제사회 일부에서 해당 법안이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이 지사는 미국 의회와 유엔(UN) 등에 공식서한을 발송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UN 측은 "유엔은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 대북전단 금지법에 힘을 실었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계양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법령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으로 국민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지은 기자